

1 유동성에도 현금성 자산 '차곡'... 부동산·주식 인기 여전

코로나 대응 과정서 통화 증가율 ↑
경제주체, 단기 상품위주 통화 운용
통화정책 당분간 완화기조 유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으로 유동성이 급증했지만 사실상 현금성 자산으로 쌓아두면서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시장으로 쏠릴 가능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2020년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시중 유동성 상황을 판단하는 데 주로 활용되는 통화지표인 광의 통화(M2) 증가율(명잔, 전년동월대비)은 2019년 12월 7.9%에서 올해 6월 9.9%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올해 들어 코로나19에 대한 정책 대응 과정에서 통화 증가율이 가팔라졌다.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들은 보유한 통화의 상당 부분을 단기성 금융상품으로 운용했다.

상반기 중 M2 증가액을 금융상품별(M1 및 M1제외)로 나눠보면 M1은 133조원 늘어 전체 M2 증가액 164조9000억원의 80.7%를 차지했다. 수시입출식



박종석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0년 9월) 설명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은행

예금과 요구불예금이 각각 72조6000억원, 49조1000억원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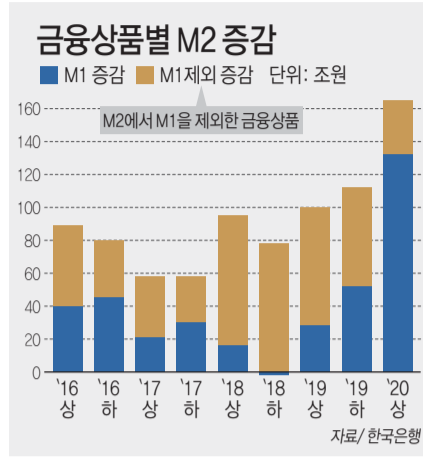
반면 정기예금, 수익증권 등 M1에 포함되지 않는 중장기성 금융상품은 같은 기간 31조9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한은은 "M1/M2 비중이 2019년 12월 31.8%에서 2020년 6월 34.4%로 크게 상승했다"며 "저금리에 따른 중장기성 금융상품의 금리 유인 약화와 기업 조달 자금의 단기운용 등에 주로 기인한

다"고 설명했다.

유동성 확대가 코로나19에 따른 실물 경제 충격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지만 리스크도 누적되고 있다.

한은은 "시장금리가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고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시중 유동성이 단기화되고 있다"며 "단기화된 자금이 수익추구를 위해 자산시장 등으로 쏠릴 가능성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계대출과 주택가격은 서로 맞물려 4~5월 중 주춤하다가 6월 이후 다시 들썩이고 있다.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는 다소 축소됐지만 주택거래와 분양 관련 자금수요로 신용대출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6월 이후 높은 증가세가 이어졌다.

주택가격은 가격 상승 기대감에 수도 권과 비수도권 모두 6월 이후 상승폭이 확대됐다. 다만 8월 들어서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 등의 영향으로 오름세가 다소 축소됐다.

한은은 "앞으로 정부의 주택관련 대책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 등이 주택가격 상승 기대와 주택시장으로의 자금 쏠림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그간의 주택거래 증가와 전세가 상승, 하반기 분양 및 입주물량 확대 등이 가계대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은은 또 "주택시장으로의 자금유입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관련 동향을 계속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통화정책은 당분간 완화기조다.

한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도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며 "이 과정에서 코로나19의 재확산 정도와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그간 정책대응의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국내 주요 은행이 개인에게 내준 신용대출 잔액이 8월 한 달 새 4조원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금리 흐름에 신용대출 금리도 떨어지자 이를 활용해 공모주 등 주식 투자 자금을 마련하거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피하려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은 명동 하나은행 본점 앞 /연합뉴스

2 제조, 도·소매업 중심 기업대출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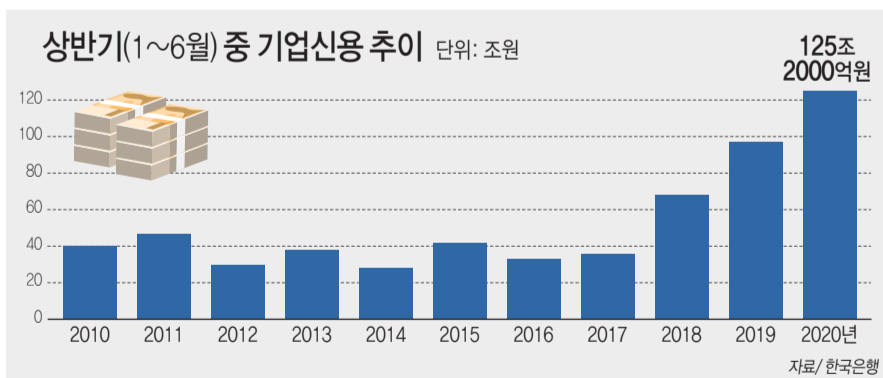
신용경색 완화에도 위험지표 그대로
기업신용 125조 ↑... 2001년 이후 최대
"정부 지원에 의존한 중소기업 위형 커져"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으로 기업대출이 급증하면서 중소기업의 신용 리스크(위험)에 경고등이 켜졌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2020년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 중 예금취급기관(은행+비은행)의 기업신용은 125조2000억원 증가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1년 12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가계대출도 늘었지만 기업대출이 더 크게 늘어나면서 민간신용의 추세치 상회폭이 확대됐다.

예금취급기관의 기업대출은 119조5000억원, 회사채 등 직접금융을 통한 신용공급은 5조7000억원 늘었다.

기업에 대규모로 공급된 유동성은 대부분 코로나19의 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기업의 영업활동에 활용된 것으로 추정됐다.



용도별로는 운전자금대출이 2019년 중(분기 평균) 13조7000억원 증가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44조9000억원 급증했다.

업종별로 보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크게 확대됐으며, 부동산업 대출 증가 규모는 예년 수준을 소폭 웃돌았다.

문제는 늘어난 유동성으로 신용경색은 완화됐지만 신용위험지표는 그대로라는 점이다.

회사채 신용스프레드는 코로나19 확산 직후 빠르게 확대됐다가 크게 낮아지지 않고 있다. 금융기관의 기업 신용위

험에 대한 경계감도 금융위기 당시와 달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은은 "기업부담 레버리지 증가와 자산가격과 실물지표 간 괴리 등 코로나19 이후 누적되고 있는 잠재리스크가 부각될 가능성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실물경기 회복이 지연될 경우 주가 등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거나 그간 정부의 금융지원 조치 등에 크게 의존해온 중소기업들의 신용위험이 증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상미 기자

3 "대면활동 급감... 민간소비 회복 더딜것"

코로나 장기화에 소비회복 제약
고용·소득 충격, 취약계층에 집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 다시 확산되면서 민간소비의 회복이 예상보다 더딜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2020년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소비는 코로나19 직후 크게 위축된 후 2분기 중 다소 회복됐지만 회복 양상은 재화와 서비스 소비 간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재화소비의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부 지원책에 힘입어 2분기에 큰 폭으로 반등했다. 반면 서비스소비는 다소 회복됐지만 재화소비에 비해 속도가 완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숙박·음식, 예술·스포츠·여가, 운수·창고 서비스 등에 대한 소비는 반등은 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크게 저조한 수준이다.

한은은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될 경우 대면서비스 소비 부진 지속과 고용 및 소득 여건 개선 지연, 대체소비 확대 관련 불확실성 등이 향후 민간소비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일단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로 대면서비스 기피 경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대면활동 위축은 경제활동 제약이 완화되어도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 등으로 보건상의 안전성이 입증되기 전까지 뚜렷하게 나아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런 대면활동 위축은 향후 고용 및 소득여건 개선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표적인 대면서비스업종인 숙박·음식, 교육, 예술·스포츠 등은 여타

<민간소비 동향>

구분	2019		2020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민간소비	0.4	0.7	-6.5	1.5
내구재	1.4	4.9	-4.7	18.3
준내구재	-1.7	-2.5	-13.6	11.5
비내구재	0.6	0.2	-0.4	-0.4
서비스	0.7	0.6	-7.9	-0.7

(계절조정계열 전기대비, %) /한국은행

산업에 비해 취업유발효과가 높고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또 향후 대면접촉 최소화와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해 자동화·무인화가 가속화될 경우 기존 일자리가 추가로 감소할 수도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및 소득 충격이 취약계층에 집중됐다는 점도 문제다.

2분기 중 가계소득은 이전소득이 크게 늘면서 전체적으로는 증가했지만 근로 및 사업소득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상당폭 감소했다.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득여건 개선이 지연될 경우 경제 전체의 소비 부진을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저수준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노동수요가 줄어들 수 있는 점도 취약계층의 소득여건 개선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한은은 "민간소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상당한 제약요인들이 잠재해 있어 그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더딜 것"이라며 "다만 정부의 소득 및 소비 지원 정책과 소비위축에 따른 저축 증가 등은 향후 민간소비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